

해외입국 숫자·나라 확인 못한 광주시…‘묻지마 귀가’ 논란



31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생활치료시설로 쓰이는 광주 서구 치평동 5·18교육관에서 입국자들의 가족들이 광주시 공무원에게 항의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29일 코로나19 증상이 없더라도 유럽?미국발 입국자를 전원을 입국 후 바로 생활치료센터에 격리하고 3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별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그러나 행신발 목포행 KTX를 타고 이날 오전 12시 25분쯤 광주에 도착한 해외 입국자 13명은 기차에서 내린 후에야 이와 같은 소식을 접했고, 유럽이나 미국에서 오지 않은 시민들도 있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광주시가 해외 입국자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지만 해외 입국자 수도,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 등 우왕좌왕했다.

31일 광주시에 따르면 해외 입국자 관리 강화 방침에 따라 이날 0시 25분쯤 KTX를 타고 온 해외 입국자 10명을 미니버스에 태워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인 5·18 교육관으로 이송했다.

시설을 찾은 해외 입국자 가족들이 제대로 된 연락을 받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강하게 항의했다.

결국 3명만 시설에 입소하고 7명은 자가격리됐다.

하지만 이날 현장에 있었던 관계자는 물론 이들을 이송한 관계자도 13명을 5·18교육관으로 이송했다고 밝히면서 입국자 숫자부터 혼선을 빚고 있다.

해외 입국자를 이송한 관계자는

입국자 들어온 지 10시간 지나 인원수 13명으로 확정

안내도 없이 나라 확인 않고 격리하려다가 항의 받기도

“해외입국자를 마중 나온 가족들이 자가격리를 하기 위해 준비한 상태에서 광주시가 3일간 격리조치한다고 하니 항의가 있었다”며 “그래서 1명은 광주송정역에서 집으로 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음 버스를 타신 분들은 미국에서의 입국자가 2명, 유럽에서 입국자가 1명 등 3명으로 시설에 입소했다”며 “나중에 온 9명은 연락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항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해외 입국자들이 머물렀던 나라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채 귀국을 허용하며 방역에 하점을 드러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말을 마중 나온 한 남성은 “아이가 역에 도착할 때까지도 당시자나 가족들은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다. 격리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잘 부탁한다’고 말하기 위해 여기에 왔겠지만, 지금은 이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오게 됐다”며 설명을 요구했다.

한편 광주시는 해외 입국자들이

광주에 들어온 지 10시간이 넘어

서야 인원수를 13명으로 확정지었다.

이중 1명이 차자로 귀가는 등 총 3명은 광주송정역에서 바로 귀가했고, 10명이 교육관으로 향했다. 교육관으로 향한 10명 중 3명은 시설에 격리됐고, 7명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격리됐다.

이들이 입국한 나라로 시설에 격리된 3명 중 2명은 미국, 1명은 영국에서 입국했고 귀기한 7명 중 2명은 일본, 1명은 미국, 헝가리 2명, 러시아 3명으로 파악했다.

다만 광주송정역에서 귀가한 사람 3명의 나라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혼선을 빚은 것에 대해 광주시는 중앙에서 명단이 늦게 내려왔던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시 관계자는 “중앙에서 명단이 늦게 내려와 (가족들에게) 통보하기 어려웠다”며 “시스템상 공항에서 입국하면 그 명단을 각 지자체로 내려보내는데 수천명이 들어오다보니 지자체에 통보가 늦어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광명역에서 KTX 승차권을 끊으면 광주로 몇명이 내려올지 알 수 있다”며 “다만 어느 나라에서 입국했는지 등의 신원은 알 수가 없었고 연락을 취할 방법도 없어 광주에 도착한 후에야 (격리에 대해) 안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9일부터 유럽?미국발 입국자 중 코로나19 무증상자도 3일간 생활치료센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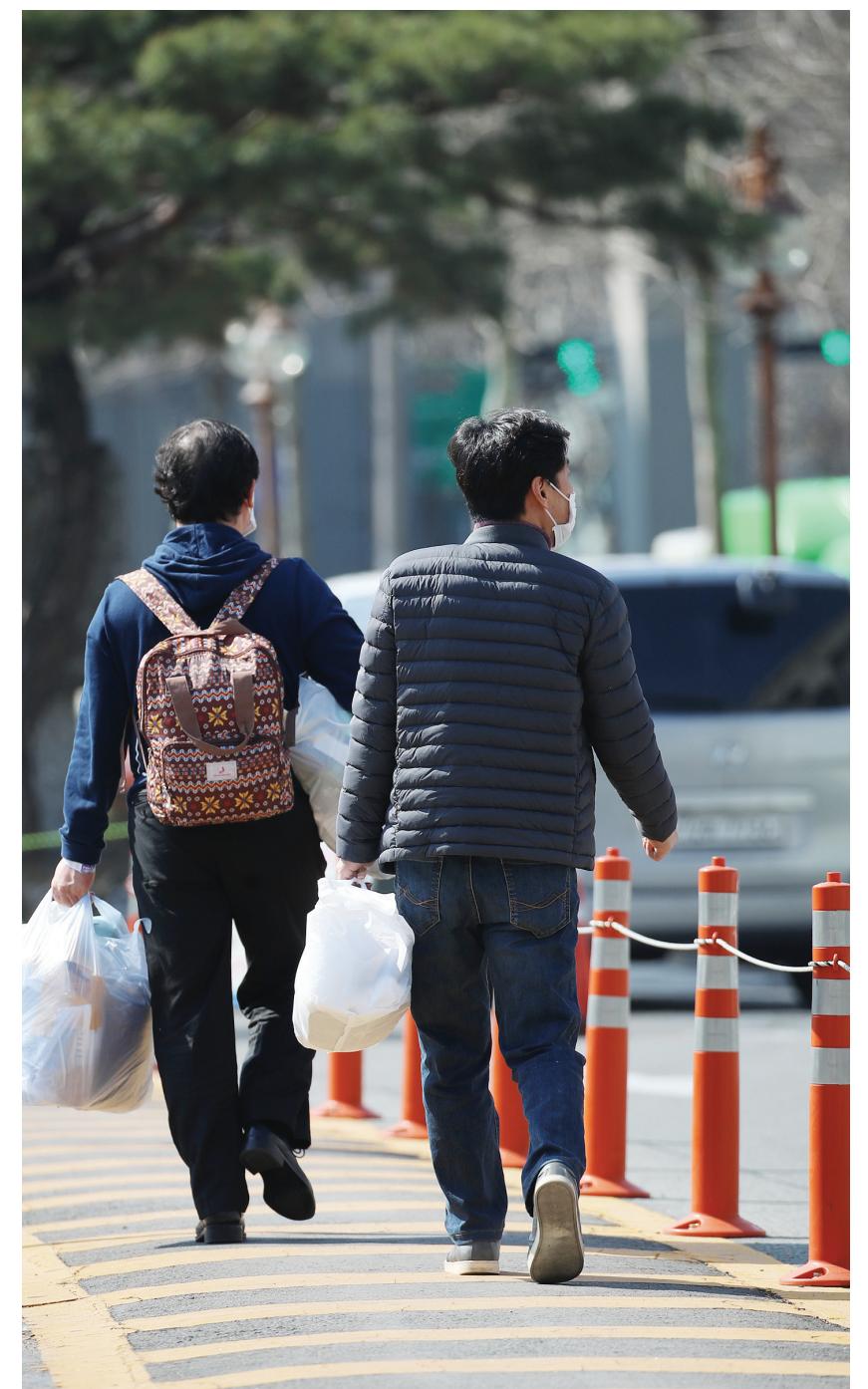
격리하도록 한 특별행정명령을 내렸다.

3일째에 검사를 시행, 양성시 격리치료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음성시 시설퇴소 후 자가격리하도록 했다.

격리기간은 입국일로부터 14일이다. 입국자 본인이나 동거인이 고위험 직업군인 경우 해외입국자 입국일로부터 14일간 시설에 격리하도록 했다.

이외의 해외입국자에 대해서는 입국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하도록 했다. 광주시는 격리 13일째 되는 날에 검사를 실시한 다음에 격리를 해제할 방침을 정했다.

최영범 기자



무안 90대 여성 확진…만민교회 직원인 아들로부터 감염

접촉자 17명은 모두 음성

서울 만민교회 직원인 아들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파악된 전남 무안군의 90대 여성(전남 11번 확진자) 외에는 31일 무안에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산 무안군수는 이날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브리핑을 갖고 전날 발생한 무안지역 2번째 확

진환자에 대한 추가 조사내용을 설명했다.

무안군 발표에 따르면 망운면에 거주하는 A씨(92·여)가 지난 30일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됐다.

A씨는 30일 오전 1차 검사에서 양성을 받은 이후, 오후 10시쯤 2차 검사에서 양성을 받아 최종 확진자로 판정됐다. 이후 곧바로 전남대병원 음압병동으로 이송됐다.

A씨가 감염된 원인은 서울 만민

교회 직원인 만내 아들 B씨(50)로 추정된다.

B씨는 지난 23일 무안 고향집에 내려와 어머니와 같이 사는 넷째 형과 25일까지 머물렀다.

이후 B씨는 승용차를 이용해 25일 서울로 갔고, 30일 오전 9시쯤 검사결과 ‘양성’ 판정돼 이날 오후 1시 서울 보라매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에 무안군은 30일 오전 10시

쯤 무안에서 함께 지냈던 어머니 A씨와 넷째 형에 대해 검체를 채취해 코로나19 검사를 의뢰했다.

넷째 형은 다행히 ‘음성’으로 나왔으나 이날 오후 10시쯤 어머니 A씨는 ‘양성’ 판정돼 1시간 뒤 전남대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들 B씨의 접촉자는 어머니 A씨와 함께 사는 넷째 형 외에, 바로 위의 형 2명, 요양보호사 1명 등이다. 또한 2차 접촉자 등 모두 17명에 대해 코로나 19 검사를 의뢰했으나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

무안=이기성 기자

오는 5일부터 자가격리 위반하면 최대 징역 1년

오는 5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1급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법제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감

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등 총 7개 법령이 다음 달에 새로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 감염병예방법은 1급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당국의

입원, 격리조치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현행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방역 당국은 최근 코로나19 해외유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철저한 자가격리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보고 있다.

또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의사의 검사 권유를 거부하면 의사가 보건소 등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보고받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염병 의심 환자를 강제로 검사를 할 수 있게 했다. 이를 어기고 검사를 받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다시 일상으로” 코로나19 완치

31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인 대구 종구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환자들이 완치 후 음성 판정에 따라 퇴원하고 있다.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